노동개혁·포털·박원순…'뜨거운 감자' 수두룩

정부·여당, 노동개혁 독자 입법 추진…환노위 '전운'
신동빈 회장 증인 출석·포털 공정성 논란 여야 충돌 예고
與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회피 의혹 공세…野 대응팀 가동

국정감사 2주째

지난주 부분 파행이 빚어지는 등 험로를 예고했던 국정감사가 2주째를 맞아 여야 간 충돌이 확산할 전망이다.

지난주에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인터넷 포털 공정성 등을 놓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안전행정위 등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모든 상임위가 가동되면서 전선이 확산하게 됐다.

우선, 정부·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노동개혁 '독자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환노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 입장을 발표한 직후 열린 환노위 국감은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끝에 파행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뿐 아니라 14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도 야당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무시한 독재"라며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무위와 안행위 국감에서도 긴장도가 최고치로 올라갈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인터넷 포털 뉴스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여당이 신청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동시에 출석한다.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을 전면에 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포털 뉴스가 야당 편향적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새누리당 모두 당력을 집중할 태세여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안행위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박 시장에 대해 여당은 결정적 한방이 될 정보를 전방위로 수집 중이어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미 서울시당 차원에서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 가동에 들어간 상태여서 당 차원에서 정치공세에 대해 단단히 방어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13일 " 박 시장 측이 병역 의혹을 제기한 한 보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은 물론 이를 보도한 한 지상파 방송사 간부들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 열리는 국감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로 한바탕 충돌했던 교문위는 각 지방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을 벌일 예정이어서 교육계와 예술·문화 단체에서의 이념 편향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 기관의 경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15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찰에 이어 오후 2시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가 빛가람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과기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전ETRI에서 열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노사정 막판 협상 돌입

노사정 대타협 여부를 판가름할 막판 협상이 13일 재개됐으나 이견이 커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어제 회의에서 조정안을 만들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조정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얘기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강당에서 열린 무소속 천정배 의원 차녀 결혼식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참석, 천 의원과 축하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의원 딸 결혼식 野 의원 총출동

야권 지형재편의 한 중심에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차녀 결혼식장에 야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12일 열린 이 결혼식에는 4·29 관악 보궐선거 패배 후 고향인 순창에서 칩거해온 정동영 전 의원이 상경, 선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등 과거 정풍운동을 함께 이끌던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신당론과 맞물려 내년 총선 국면에서 '천·정 호남연대'가 설왕설래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고, 최근 대통합론을 내세워 천 의원과 정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결혼식장을 찾았다. 이날 예식이 진행된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 대강당에는 2000여명에 달하는 하객들이 몰리며 장사진을 이뤘다.

권노갑 상임고문,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를 비롯, 이종걸 원대대표, 전병헌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미인양 선박 800척…2차 해양오염 우려"

신정훈 새정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지난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우리나라 영해에서 침몰한 뒤 인양하지 않은 선박이 800척이 넘어 2차 해양오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해 내에 침몰한 선박은 모두 801척이었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이 608척으로 가장 많았고 예선과 화물선이 각각 54척과 39척으로 집계됐다. 해역별로는 남해가 363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 270척, 동해 168척 순이었다. 정부는 올 들어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 평가도'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잔존유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침몰선박 조사 예산은 지난해 3억원, 올해 2억원이며, 내년에도 2억원에 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전사 장병 방한장갑, 3년째 중고품 사용"

김광진 새정치 의원

특전사 장병이 3년째 방한장갑을 신규로 지급받지 못해 전임자가 사용했던 중고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3일 육군과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특전사 방한장갑 계약과 납품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는 지난 2013년부터 방한장갑 6천301조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매년 업체가 규격이 맞지 않는 제품을 납품해 2013년에는 계약이 해지됐고, 지난해엔 9개월째 납품이 지연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야 계약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계약한 업체는 납품 기한이 9개월이나 지났고 지연배상금이 보증금을 넘어섰는데도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1만5000여명의 특전사 장병 중 40%가 전임자가 쓰던 중고품을 3년째 대물림해 사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이슈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동서발전, 대기업 컨소시엄 참여 문제"

정무위·산자위 지적

광주시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대기업 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다. 발전 자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투자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 수의 계약 등에 나선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 공모사업에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동서발전이 참여하는 대기업 LG 컨소시엄은 REC 생산 판매 계획 적정성, 송전설비 계통 연계 적정성, 기업신용평가부문 등의 평가 항목에서 타 컨소시엄에 비해 높은 점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산자위(발전 자회사)와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한국 동서발전이 지자체 공모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과 발전 자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지자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측면 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의 추미애 의원도 이번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동서발전에서는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경제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